

이란, 실업문제가 폭발할 위험에 직면

이란 정부는 최근 일본 외무부장관의 테헤란 방문시 일본의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투자를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석유와 가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이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 조치, 내부적으로는 개혁파와 강력한 보수파 간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투자 보장제도의 미흡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란에는 350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여 실업률이 16%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층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연간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는 연간 100만 개의 신규 고용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이 현상을 방치하면 4년 뒤에는 실업률이 24%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의장인 고등고용위원회(High Council of Employment)는 주장하였다.

사실 2000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제3차 개발계획은 2000/01년의 실업률 16%를 2004/05년에는 12%로까지 떨어뜨릴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란 경제의 축인 석유와 가스 부문 및 석유화학부문은 최근의 대단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치산업이어서 고용흡수력이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떨어진다. 또한 일반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국영기업과 각종 이슬람기금(bonyard)이 경영하는데 생산성이 낮아 국제경쟁력도 뒤떨어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근래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파 정부가 경제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실시하고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져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주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나 농산물 등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재정으로써 부담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고용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외국인투자유치법의 개정에 정부가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수파와 개혁파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이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합의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최종안이 합의되기까지는 몇 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도 이란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지분의 단독소유가 가능하며 소득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 지분 비율의 상한이 49%이다. 지분 제한을 포함한 여러 제한들을 가능한 한 풀어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 개혁파의 의도이며 보수파는 민족주의적인 명분을 내세워 개방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